

2006. 10. 11

#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와 과제

김경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kh99kim@kwdire.kr

## 1. 들어가는 말

성인지 예산 조항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이 2006년 9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은 지난 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과 91년에 만들어진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것인데, 이 법에서는 정부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는 서류(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결산서에도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국가재정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과 달리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인지 예산은 1980년대 중반 호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어 현재 영국,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0여 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여성계가 성인지 예산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여성 국회의원들과 여성가족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마침내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일정 정도의 합의가 없고 어떠한 분석방법을 채택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 갈 길이 먼 상태이다. 다행스럽게도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시기가 2010년이어서 준비기간을 갖고 있지만 성인지 예산제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관계 기관간의 합의를 이루어 나가며, 담당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도록 교육하기에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개념에 관한 논의와 성인지 예산의 분류형태와 분류방법, 국내에서 제도화되어 온 과정과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성인지 예산이란 무엇인가?

성인지 예산은 호주에서 시작될 당시 여성예산(women's budget)으로 호칭되었으나 최근에는 젠더예산(gender budget), 성 인지적 예산(gender-sen

sitive budget), 성 반응적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후 OECD, World Bank, UNDP, EU, The Nordic Council of Ministers 등 국제기구가 성인지 예산의 실행을 지원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의회,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형태로 성인지 예산 분석과 활동을 발전시켜 가고 있다(Schmitz, 2006). 게다가 EU는 회원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 주류화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어 유럽 국가들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적극 실행하려는 분위기이다.

유럽의회의 성인지 예산 규정은 “성인지 예산은 예산과정에 성 주류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성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예산에 대한 성별평가, 모든 수준의 예산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 그리고 세입과 세출의 재구조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을 선도적으로 실행했던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여성예산으로 사용했던 것과 달리 유럽과 영연방(Commonwealth) 국가들은 성 반응적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데 목표를 두기 보다는 예산에서 성 주류화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것은 예산 형성에서 세출에 대한 분석과 세입의 형성방법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인지 예산은 성별 격차를 줄이는 데에 정부 예산 프로그램의 영향을 판단하고 이해를 돕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을 돕는 부가적이고 분석적인 도구이다.

국제적인 경향과 달리 국내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논의되었던 2000년 초에는 분석의 초점이 여성 정책 관련 예산이었고 일반 예산에 대해서는 성 인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국내에서 2001년에 성인지 예산분석을 시도했던 연구에 의하면, 성인지 예산은 물성적 예산과 달리 국가 예산의 논의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되는 것이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이혜경, 2001). 이후에 국내 연구자들이 성인지 예산을 규정한 내용을 보면, “성인지 예산이란 정부수입과 지출의 성별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예산 배분이 남녀 간의 경제적, 사회적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 혹은 남성을 위해 형성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성을 가지고 실제 예산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김경희 외, 2003)라고 정의하고 있어 ‘예산 배분에 대한 성별 분석’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성 인지적 예산의 개념이 사전 분석의 성격을 갖기 보다는 사후분석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성인지 예산 개념에 대한 접근은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하다. 4개 부처(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예산 시범분석 연구에 의하면, “성인지 예산은 공공지출로부터 남녀가 균등한 수혜를 받도록 하고 공공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전 과정에 남녀의 우선순위와 요구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즉 예산이 중립적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 공공지출이 보다 성 균등한 방식으로 지출되도록 계획,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김영옥, 2004).

국내에서 논의되어 온 성인지 예산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공통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며 예산 전반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것으로 물성적 예산과 구분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예산분석과 예산편성, 집행과정에 남녀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성인지 예산분석을 위해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성인지 예산분석은 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집중됨으로써 사후분석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UN과 EU 등의 국제기구가 규정한 성인지 예산의 개념을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이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부문을 포괄하고 있으며 사전적 성격과 함께 사후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예산의 구성과 집행, 평가 전반에 걸쳐 성 인지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어 대조가 된다.

### 3. 성인지 예산의 분류형태와 분석방법

#### 1) 성인지 예산의 분류형태

성 인지적 예산분석은 세입과 세출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세입부분은 주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중심으로 분석되어져 왔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분석에서 간접세는 빈곤층과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도출되었다. 세출부분은 중앙과 지방, 부처별 혹은 사업별로 다양하게 검토되어 왔다. 국제사회에서 사용되어 온 성 인지적 분석을 위한 예산 분류에 따르면, 전체예산을 성 특정적 예산(gender-specific expenditures), 성 형평성 예산(expenditures promoting gender-equity), 일반 주류 예산(mainstream expenditures)을 확보하기 위해 쓰이는 예산으로 나눈다. 일반 주류 예산은 성 특정적 예산과 성 형평성 예산에 분류되지 않은 일반 예산을 말한다. 그런데 2006년 3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인지 관련 재정연구를 위한 TF가 제시한 성인지 예산의 편성과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예산편성 지침안에 따르면, 양성평등정책 예산과 일반예산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양성평등정책 예산에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사업과 기타 양성평등정책사업을, 일반예산에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형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 특정적 예산이란 남성이나 여성 중 특정 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으로 예를 들면, 임신부 검진사업비, 미혼모시설 운영 지원비,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 등이다. 성 형평성 예산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육사업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양성평등정책예산이 성 특정적 예산과 성 형평성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때, 국회와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성인지 예산의 편성방식은 국제사회가 분류한 세 범주를 두 범주로 축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 2) 성인지 예산의 분석방법

EU와 Commonwealth, UNIFEM 등에서 사용하는 성인지 예산분석 방법은 다양하며 분석도구들은 다음의 6가지로 나타난다. ①도구 1(성인지 정책평가: gender-aware policy appraisal)예산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평가 ②도구 2(수급평가: beneficiary assessments)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수혜자의 수급평가 ③도구 3(성별 공공지출 분석: gender-disaggregated public expenditure incidence analysis)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분석 ④도구 4(성별 시간사용분석: gender-disaggregated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budget in time use) 예산배분과 가구 구성원이 사용한 시간에 예산배분이 미친 효과간의 연계성 분석 ⑤도구 5(성인지 중기 경제정책 틀: gender-aware mid-term economic policy framework) 경제정책이 여성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 ⑥도구 6(성인지 예산보고서: gender-responsive budget statement) 도구 1-5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서 예산, 결산을 검토한 보고서이다.

국내에서는 부처별 예산 분석과 여성단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분석에서 도구 1(정책평가)이 사용되었으며 2003년 여성가족부 용역과제로 실행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에서는 도구 3(성별 공공지출 분석)이 적용되었다. 2004년부터 기획예산처가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별영향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 도구 5(성인지 중기경제정책 틀)가 우리나라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도구 6(성인지 예산보고서)은 국가재정법에 포함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는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4.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의 추진 현황

##### 1)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과정

국내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이 성 인지적 예산을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2001년부터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성 인지적 예산 분석에 나섰다. 2003년에는 성 인지적 예산 확대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요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2001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예산을 분석한 데 이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 인지적 예산 정책 마련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어서 국회여성위원회는 2002년 10월에 ‘성 인지적 예산편성 및 자료제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 결의안의 내용은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운용을 위해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관련 자료를 여성부 및 국회 여성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에서도 성인지 예산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성 인지적 예산 사업이 포함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성 인지적 예산 도입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성 인지적 예산분석 지침,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같은 해 기획예산처에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성 인지적 예산편성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성평등 관점 반영,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및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의 개발지원 추가, ‘일부 주요지침’ 중에 ‘여성관련사업의 예산 요구’를 신설하도록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예산의 주관부처인 기획예산처는 2003년부터 예산안 편성지침에 ‘능력개발, 보육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명시하면서 여성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에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이 논의되어 왔으며 국회의원 주최 간담회,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방안이 거론되어 왔다. 국회에서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양성평등포럼이 구성되고 남녀 국회의원 100여명이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를 촉구하면서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2006년 1월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성인지 관련 재정연구를 위한 TF’가 구성되었고 연구결과가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06년 이후에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해지면서 국가재정법(안)에 성인지 예산관련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최근에 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성인지 예산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제16조

예산의 원칙에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결산에서도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 결산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200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성별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예산요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200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사업의 성격상 성별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성별영향을 감안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관부처인 기획예산처가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 2) 성인지 예산의 추진 현황

국내의 성인지 예산분석은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분류범주와 분석도구를 준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관련 예산의 규모와 그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성인지 예산의 개념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성인지 예산분석이 정부의 예산 전반에 걸쳐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분석내용을 보면, 여성관련 예산분석에 우선순위가 두어져 있고 세입보다는 세출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예산안 규모 파악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기금사업은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01년에 여성단체가 실행했던 성인지 예산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예산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회계 대비 여성정책 예산의 비율을 파악하고 어떤 사업이 여성업무로 책정되어 예산이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예산분석을 통해서 평가하고 여성정책 관련 업무가 양성평등의 실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다. 같은 해에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과제로 이루어진 ‘성 인지적 보건복지 예산분석 및 편성·집행방향’에서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성인지 예산의 분류범주-성 특정적 예산, 성 형평성 예산, 주류예산-에 따라 나누고 1991년에서 2000년간 추이 분석을 통한 특징을 도출하는 한편, 1995년, 1997년, 1999년도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예산, 활동사항, 결과 및 영향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1년에서 2000년간 주류예산이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성 형평성 예산은 5-9%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성 특정적 예산은 1%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이혜경 외, 2001).

성인지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주요 행정부처에서도 여성예산의 규모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여성백서를 보면, 2002년부터 매년 각 부처의 여성정책 예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예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여성관련 예산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에 포함되는 기관이 9개 기관에서 20개 기관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05년 현재 여성정책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처는 총 18개이며 예산 규모는 6,992억 원이다. 이는 2004년의 5,204억 원에 비해 32.26%(1,679억 원)증가한 금액이며 전체 예산 1,949,570



억 원의 0.35%에 해당한다(여성부, 2004). 이후에 여성관련 사업의 예산 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2006년 현재 여성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각 부처 여성관련 사업의 예산안 규모는 총 9,187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33.9%가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는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145조 7,029억 원의 0.63%로 아직까지 여성관련 예산은 그 비중이 1%에 채 못 미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 분석과정에서는 여성관련 예산에 한정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전체예산의 99%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예산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는 상태이다.

## 5. 향후 과제

정책전문가들은 국가재정법이 국가재정운용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기재정운용, 총액배분-자유편성, 성과관리, 프로그램 예산회계제도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성이 높아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예산회계제도의 경우 목적이 성과관리를 위한 것이며 프로그램 예산 개편의 주요내용이 현재 장-관-항-세항-세세항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을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체계로 바꾸는 것이라고 볼 때, 행정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양성평등정책관련 예산은 성과관리에 갖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재정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되어야 하며 세입과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여성인적자원의 활용과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인지 예산의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개념을 국내에서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분석방법을 보면, 여전히 여성관련 예산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반 예산에 대한 성 분석을 결여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일반예산이 전체예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인지 예산분석이 국가 재정운영 전반에 통합되어 논의되지 못한 채 여성예산, 성 특정적 예산에 제한되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온 성인지 예산의 분류형태-성 특정적 예산, 성 평등적 예산, 일반 예산-는 장기적으로 성인지 예산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는 유용해 보이나 특정한 예산 사업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를 분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2007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예산과 성별영향평가 사업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양성평등정책 사업을 분류할 것인지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인지 예산 제도의 추진체계와 관련 부처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성인지 예산 정책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주축이 되고 여성부가 적극적 협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발전기본법상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양성평등이라는 법의 기본적인 취지와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이 법 제10조 정책의 분석과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에 성인지 예산이 포함된 국가재정법은 기획예산처 소관법률이다. 성인지 예산의 소관부처는 기획예산처이지만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이 양성평등정책예산과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되어 있어 여성가족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의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관련부처의 구체적인 역할분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7. 성인지 예산안 작성 지침

### 7-1. 대상사업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
  - 소관부처별 세부사업 목록은 추후 별도 통보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 2004년 및 2005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편성

### 7-2. 작성방법

- 사업설명자료 작성 시 양성평등정책예산 해당 여부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여부를 표시

| 예비타당성<br>실시여부 | 총사업비 관리대상 |      | 총액계상<br>예산사업 | 예산점검<br>관리대상 | R&D사업 |            | 양성평등<br>정책예산<br>해당여부 | 성별<br>영향평가<br>해당여부 |
|---------------|-----------|------|--------------|--------------|-------|------------|----------------------|--------------------|
|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              | 해당여부  | 출연기관<br>코드 |                      |                    |
|               |           |      |              |              |       |            | ○                    | ○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2004년과 2005년에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요구
  -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외부기관 지적사항(사업별 설명자료 양식 참조)에 요약하고, 지적내용에 대한 부처의 검토의견 제시

자료 : 기획예산처(2006), 「2007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넷째, 성인지 예산은 예산과정 전반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결산작업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에게 일정 수준의 성 인지력을 요한다.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성인지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게 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성인지 정책분석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은 전체 대상자의 0.5%인 4,271명에 불과하다. 특히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국무총리실, 중소기업청 등은 단 한명의 참석자도 없었으며, 재경부(0.1%), 교육인적자원부(0.1%), 외교통상부(0.1%), 법무부(0.1%), 정통부(0.1%), 건설교통부(0.1%) 등도 사실상 성인지 교육에 귀를 막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06. 4. 24). 주요 부처에 양성평등 관련 사업이 존재하고 있고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많아질 수 있다고 볼 때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 중요하며, 특히 성별영향평가와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인지 예산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김경희 외. 2003. 「성 인지적 예산분석 지침 수립방안 연구」. 여성부 연구보고서.
- 김양희 · 김경희. 2006.6.27. 『성인지 예산-성별영향평가 연계와 지원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제 32차 여성정책포럼 정부 재정운영과 성인지 예산-성별영향평가.
- 김영옥. 2004. 「4개 부처 “성인지 예산” 시범분석」. 여성부.
- 성인지 관련 재정 연구를 위한 TF. 2006. 「성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방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여성가족부. 2001-2005. 「여성백서」.
- 이혜경. 2001. “성 인지적 보건복지 예산 분석 및 편성·집행의 방향」. 보건복지부.
- 한국여성민우회. 2001.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심포지엄 자료집.
- Schmitz, C. 2006.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n the Nordic Countries.” [www.ief.es/Investigation/Recursos](http://www.ief.es/Investigation/Recursos)
- 세계일보. 2006. 공무원들 “성 인지 교육” 참석률 0.5% 불과. 오승재. 4월 24일.